

# 국민의힘 지도부·중진 “文대통령, 추미애와 공범될 수도”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

#### “尹 몰아내려 무리수 쓰면 후회할 상황 올것”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윤 총장을 몰아내려 자주 무리수를 쓰면 결국 과거 정권처럼 나중에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걸 명심하고, 현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은 오직 임명권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가를 냉정히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장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징계 회부는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법무부 검찰위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어제 법원 판결도 직무정지 효력 정지이긴 하지만, 그런 것(징계 회부)이 잘못됐던 점이 포함됐다”며 “이 단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정도(正道)”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면서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은 상태이니 즉각 수용하길 바라고 탄소리하지 말길 바란다. 공당 집권여당 대표의 국조 발언은 뒤로 물릴 수가 없다. 즉

각 국정조사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진석 의원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있다.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며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고집스런 정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데서부터 촉발됐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찍어 내기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장면이었다”며 “현 정권은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하고 있다. 윤 총장 찍어내기의 후폭풍은 김영삼 찍어내기 후폭풍의 대자부가 될 수 있음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문표 의원은 “역사가 살아있다면 이 문제는 추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문 대통령도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 엄청난 현실이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걱정하고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청와대 앞에서 초선들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여기에 또 힘을 실어서 우리가 확

산하고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종말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법무부 검찰위 결과와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놓고 보면 추 장관이 벌인 추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추 장관의 행위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혼자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양심이 남아 있는 검사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비리가 언제든지 들끓날 수 있음을 권력을 안다”며 “그래서 청와대의 사냥개 총견 노릇을 충실히 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수사조차 못하고 덮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추미애에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권력 비리는 아예 수사 시작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공수처는 권력비리 은폐처”라고 했다.

북당 후 중진회의에 처음 참석한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는데, 사실상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혁, 검찰장악을 하고 있다”면서 “정의감 있는 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찰들은 전부 좌천시키고,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총견 같은 검사들만 요직에 등용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권력의 오만은 권력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의 직 무배제 효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났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직무배제 조치, 징계 조치를 문재인 정부는 철

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의 완성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켜야 하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장악 책동을 멈추고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한 발을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文대통령, 박상훈·박철민 등 6개국 대사 신임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駐) 스페인·헝가리·라오스 등 6개국에 부임하는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총무실에서 주스페인·헝가리·라오스·가나·에콰도르·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에 파견 예정된 한국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스페인대사 박상훈 ▲헝가리대사 박철민 ▲라오스대사 임무홍 ▲에콰도르대사 고훈우 ▲가나대사 임정택 ▲아프가니스탄대사 최태호 등 6명의 신임 대사와 각 가족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외숙 인사수석 비서관, 김용현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총무실에서 스페인, 헝가리 등 6개국 신임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했다. 외교부에서는 최준건 1차관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 6명의 배우자 및 각 가족들에게 축하의 의

미로 꽃다발을 선물했다. 수여식 이후에는 인왕실로 이동해 신임 대사와 별도의 환담을 가졌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野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자존심도 없나”

### 정진석 “김여정 업포 없었다면 與 법 만들었겠다”

야당은 2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또 이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업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었겠느냐”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고, 김여정 존경법이고, 칭송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여기 앉아있는데 대한민국 자존심도 생각해주지 않지 않느냐. 국민의 대표가 무리수를 뒤편이 이런 법을 만들어 처리하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아무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분명 한 위험적 요소가 있어 우리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할 것이며, 어떤 명분으로라도 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박진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침해가 되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 중대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대북전단 규제가 가능한 현행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무리하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 취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전날 외통위 법안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한 절차 부분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지 90일이 지나면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는 조항만으로 조정이 되지 않은 실익은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을 소위에 회부한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회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도 “어제 법안소위에 회부되자마자 야당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여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협치 실종이며 의회독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일방 강행처리된 법안 소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적어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안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지하게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뉴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